

기업들은 속이고 관리·감시는 허술...지역민들 충격·분노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파장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대표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민들은 깊은 배신감과 분노에 빠졌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허용기준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던 업체가 적발되자 환경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5년부터 4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중 LG화학 여수 화학공장·한화케미칼 여수 1·3공장·에스엔씨·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남해환경·쌍우아스콘 등 배출업체 6곳과 (유)지구환경공사·(주)정우엔텍연구소·(주)동부그린환경·(주)에어릭스 등 측정대행업체 4곳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여수 시민들은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조작

“믿었던 대기업까지...” 허탈 환경단체 최고형 처벌 요구 LG화학 관련시설 폐쇄키로

했다는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모(62·여수시 신기동)씨는 “그동안 여수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허용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대기업이 설마 그럴지는 몰랐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나름의 신뢰가 있었는데 이런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단체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차례로 GS칼텍스, LG화학 화학공장, 한화케미칼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환경부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은 1~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20일로 대기업들에겐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이 우려된다”며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상습적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적용해 사업장과 경영자에 대해 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우선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직접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론을 의식한 대기업 측에서는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신화철 LG화학 대표이사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케미칼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모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폐쇄 결정이 발표된 LG화학 여수화학공장 직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1980년대 지어진 이곳은 벽지·바닥재 원재료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근무 직원 규모는 수십명으로 알려졌다. LG화학 화학공장 관계자는 “폐쇄 대상은 화학공장 중 일부로,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환 근무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문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의장대 사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국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독립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바른미래·평화 호남 중진 만찬... ‘제3지대론’ 탄력 만나

바른미래당에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중진의원원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고 통합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옛 국민의당 출신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조배숙 의원, 정대철·권도갑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정 고문이 주선해서 이뤄졌으며,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식사를 같이하는 등 꾸준히 물밑 접촉을 통해 내년 총선 전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제3지대론’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최근 평화당에서는 정 대표가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하고,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도 재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대결 구도를 깨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호남을 주축으로 한 이들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통합해 제3정당을 출현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연합뉴스

기업 자율에 맡겼더니 대행업체와 짜고 제도적 맹점 악용

관리업무 2002년부터 지자체로

인력 부족해 실시간 감시 구명

근본·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는 기업과 대행업체의 비양심에 제도적 맹점까지 더해진 비리의 전형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들은 기업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8932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는 2002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지자체마다 몇 명 되지 않는 담당 공무원으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

과 대행업체를 믿고 맡겼지만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기업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당국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속일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날 “적발 사례가 대기오염 저감 정책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이 의무화됐으나 대당 설치가격은 2억5000만원, 연간 유지비용은 3000만원에 달한다.

부피도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상자만큼 커 소형 배출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산단 한 화학기업은 모두 13개의 TMS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 여전히 기업 자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측정치 조작도 TMS가 설치돼 있지 않는 소형 굴뚝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오염물질이 하늘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395곳이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체와 계약할 경우 연간 15억~18억원 정도를 받는다. 대행업체가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데도 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발된 기업들은 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농도 측정값을 조작해 설비개선 비용을 아끼고 심지어 기본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드론(무인비행장치)과 이동 측정차량을 활용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1~2km 떨어진 원거리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쏘아 배출농도와 양을 측정하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출중한 점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4) 4·19

김광규 시인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펼치면 4.19가 나타난 해 세밀, 사람과 아르바이트와 병역문제 등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하면서 열면 토론을 벌였던 젊은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난 날이 그려져 있다. 이윽고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월급이 얼마인지 서로 묻고 중년기의 건강을 걱정하며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고개 떨군 하루가 아련하게 묘사된다.

“내 정신적 나이는 언제나 1960년의 18살에 멈춰있다”고 했던 문학평론가 김현처럼 4.19즈음이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문인들의 다양한 언어가 비장하게 다가온다. 생각해 보면 4.19정신을 기리는 다수의 문학 작품들에 비해 미술 분야에서는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는 작품을 만나기가 드문 것 같다.

완도 출신의 화가 손장섭(1941~)의 ‘사월의 함성’(1960년 작)은 작가도 언급했듯이 어쩌면 4.19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최초의 작품일 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화가가 서라벌예고 3학년이던 1960년 4월 시위현장에 함께 있다 그 목격한 장면을 스케치한 것이다.

화가는 “당시 시간만 나면 서울역 근처에서 사람들을 스케치하곤 했는데 그날 시위대를 만나 함께 합류해서 뛰었다 니다가 덕수궁 대안문 옆 골목에서 부상당한 친구를 두 사람이 어깨걸기로 부축



손장섭 작 ‘사월의 함성’

하고 있는 장면을 만났다”고 회상한다. 머리띠를 두른 중상인물 뒤로는 구호가 적혔을 필름막이 멀리 보이고 형상만 묘사된 수많은 시위 군중모습에서 그날의 격렬함과 긴박감이 전해져온다.

이 그림은 그해 여름방학기간동안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화가와 고교동기생 세 명이 함께 연 ‘삼우전’에 발표되었다. 민중미술의 선구에 서왔던 화가는 화업 60여 년 동안 역사, 현실, 민중 삶, 시대의 풍경 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 박사>

